

# 음주·추행·절도...광주·전남 경찰 기강해이 '심각'

광주·전남지역 경찰들이 최근 음주 운전, 강제추행, 절도 등의 혐의로 잇따라 적발되면서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15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한 달여 동안 추행, 음주운전, 가정 폭력, 절도 등의 혐의로 현직 경찰관들이 입건되거나 검찰 송치, 파면 징계처리를 받았다.

이날 광주 서구 유홍주점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지난 3월 광주 서구 무대가 있는 한 술집에서 춤을 추다가 여성 이용객의 신체 일부분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음주운전 추돌사고를 낸 뒤 달아난 광주경찰청 기동대 소속 B 순경이 파면됐다.

## 최근 한달간 순경부터 경위·경감 계급까지 잇따라 적발 정우택 의원 "2018년부터 98명 기소...특단 조치 필요"

또 지난 7일에는 전남경찰청 소속 C 경위 가업무시간에 무단 퇴근해 가정폭력사건을 일으켰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아울러 지난달 23일에는 광산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D 경위가 만취해 주차된 차량서 현금 훔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4월21일에는 광주 북구 용봉동 거리에 세워진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소

츠유틸리티차를 훔쳐 탄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 산하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E 경위가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처럼 광주·전남 현직 경찰관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각종 비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된 광주·전남 경찰공무원이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국민

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소 또는 약식 기소된 광주·전남지역 경찰공무원은 총 98명(광주 28명·전남 70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은 "단속을 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끊임없이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며 "경찰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다시 확립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복기자

## 광주 서구 '찾아가는 구청장실' 직원들 '부담'

노조, 동 행정복지센터 277명 대상 설문...218명 참여  
장기자랑·필요성 의문 답변 많아...오늘 집행부와 논의

광주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찾아가는 내걸에 구청장실'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서구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4일까지 '근무하고 싶은 직장(동 행정복지센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자 277명(6급 이하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인 해당 설문조사에는 218명이 참여, 78.7%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 문항은 26개로 ▲근무 환경 ▲동 업무 ▲갑질 ▲인사 운영 ▲개선 방안 ▲바라는 점 등을 물었다.

이 중 10번 문항 '구청장 동 방문 및 B I 홍보 등에 직원 동원 공연·촬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매우 필요 0% (0명) ▲필요 1% (2명) ▲보통 12% (33명) ▲불필요 21% (50명) ▲매우 불필요 45% (124명)로 나타났다.

해당 항목은 광주 서구의 소동행정 시즌 2 '찾아가는 내걸에 구청장실'에 관한 것이다.

'찾아가는 내걸에 구청장실'은 지난 2월28일 금요일 1등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서구 관내 18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 간담회와 마을 현안 해결을 위한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11번 문항 '동 업무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를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찾아가는 내걸에 구청장실'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이 드러난다.

한 응답자는 "구청장의 동 방문으로 어디 동은 무엇을 했으니 우리는 더 눈에 띄어야 한다거나 부담된다는 말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게 뭘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혼동될 정도"라고 토로하며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응답자들도 "직원 동원 공연·촬영은 사기 저하, 구시대적 생각"이라고거나 "홍보용 사진 찍기 행사 같다"고 혹평했다.

해당 문항들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프로그램 준비는 전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맡아 서구청에선 사전에 어떠한 주문도 하지 않는다"며 "초기 몇몇 동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공연 등이 주민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아 뒷순번의 동에서도 아이디어를 내놓고 추진하면서 부담감을 느끼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10일 노사협의를 통해 직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안재영기자

## "합평군수, 골프장 진출입구 변경 지시 지인 땅 수혜"

감사원, 행안부에 '엄중 주의' 촉구

이상의 합평군수가 합평 일대에 조성된 골프장 진출입구 위치를 합리적 사유 없이 바꾸도록 지시, 이 군수의 지인이 수혜를 봤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공개한 '선거철 공직 기강 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합평군수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진출입구 변경으로 인한 수혜 지역 10만㎡ 이상의 토지는 이 군수 지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21년 3월 담당 부서로부터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관련 내용이 적정해 이를 인가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이 군수는 진출입구가 원래 계획대로 있을 경우 이용객들이 A 인터체인지(IC)를 이용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진출입구를 B 인터체인지와 가까운 합평군 대동면 인근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당초 진출입구도 B 인터체인지를 경우였고, 이 군수가 이를 왜곡해 사업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기재하도록 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설계비 및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비 2억원, 합평군에 진입도로 개설 비용 29억원 규모의 재정 손해를 이 군수에 대한 엄중한 주의를 촉구 하라고 했다. /김진수기자



광주 제1시립요양병원-정신병원에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15일 오전 입원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고 있다. /안태호기자

## 광주 제1시립요양병원 노조 파업... '직장 폐쇄' 맞대응

"호봉제 유지·해고자 복직" 주장...병원, 오후 6시 기해 출입 막아

호봉제 유지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광주 제1시립요양병원-정신병원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병원 측이 직장 폐쇄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산구 광주 제1시립요양병원 본관 로비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 시작을 선언했다. 출정식에는 간호 조무사·물리치료사·식당 조리원 등 지부 소속 노조원 97명 중 약 45명과 기타 노조 등 총 100여명이 참여했다.

광주 제1시립요양병원-정신병원의 전체 종사자는 187명이며 조합원 중 필수인원과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조 파업에 따라 병원 측은 입원환자 30명을 업무 협약을 맺은 다른 요양병원으로 보내면서 주치의도 함께 파견했다.

이어 병원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직장 폐쇄를 신청했으며 오후 6시를 기해 파업 참여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앞서 광주 제1시립요양병원-정신병원은 올해 2월 운영 수탁 주체가 빛고을의료재단으로 바뀌면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불거졌다.

현 운영 수탁 재단은 수익의 약 8%를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을 줄이고자 임금체계 개편에 나섰고, 노조는 이 과정에서 선전전 참여 직원 6명이 해고된 데 대해 부당함을 주장, 복직 등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총파업에 돌입했다.

박기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양질의 치료를 보

호자와 환자 부담 없이 제공해야 하는 공공병원이 노력은 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기에 급급하다"며 "정확한 합의가 있기 전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태호기자

## '5·18 왜곡 댓글' 10명 고소

오일 공법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누리꾼 10명을 고소했다.

15일 5·18민주화운동 부상·공모자회 등에 따르면 이날 두 단체는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누리꾼 10명을 수사,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두 단체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왜곡 표현 등을 인터넷에 게재한 누리꾼들을 직접 찾아냈다. /안재영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안전기원제 고사  
시제상  
제사상  
고사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패